

# “전주광역소각장 공법 선정 공정해야”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협의체 · 삼산마을 주민들, 주민 의견 수렴 · 투명한 절차 따른 합리적 결정 주문

전주광역시 소각장 공법 선정과 관련,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협의체와 삼산마을 주민들은 사업추진 및 소각방식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전주시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충분히 검증된 공법으로 소각장이 건립되기를 희망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는 절차미련을 주장했다.

17일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협의체와 삼산마을(위원장 배영길)에 따르면 이날 이들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을 배제한 사업추진 방식 및 소각방식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적극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특혜의혹이 없는 검증된 공법과 투명한 절차 및 공정한 행정을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전주시에 건의했다.

특히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협의체는 생활폐기물 정책의 최우선 원칙은 감량 △재사용 △재활용(3R)이 소각의 최후수단이기 때문에 절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전주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광역권소각장 공법을 결정해 줄 것을 재차 주장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광역시 소각장 공법 선정과 관련,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협의체와 삼산마을 주민들은 사업추진 및 소각방식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온라인 실시간 부모교육 운영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17일 '2025 3차 분기별 부모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녀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조절을 주제로 한 부모 대상 교육을 온라인 실시간 교육(ZOOM)으로 운영한다.

이번 분기별 부모교육은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증가 추세에 발맞춰 한

년상담복지센터들과 함께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이시훈 강사(성교육전문기관 와이미 대표강사)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한 성교육'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오는 10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4회에 걸쳐 박옥순 강사(청소년

년 미디어 과의존 대응 전문강사)가 부모·자녀 소통법과 자녀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돕기 위한 양육 원리를 소개하는 '2025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부모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각 교육은 선착순 5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포스터 QR코드를 활용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선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온라인 부모 교육을 통해 우리 자

녀들의 미디어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부모·자녀 간 관계 개선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청소년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지원 전담상담사를 배치하여 전주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개인 상담, 전화상담, 치유지원(병원연계) 등 미디어 과의존 수준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법제화해야”

전주시의회, 김동현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동현 의원(삼천1·2·3·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의 법제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동현 의원은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조성된 상징적 공간이지만,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의 원소재 복귀 시도 등 탈(脫)전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회귀와 대

도시 집중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탈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발치 잡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가 공공기관의 원소재지 복귀나 타 지역 동폐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와 수도권·대도시 기능 및 인력 재집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해야”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 대표 발의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성국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을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이 면제되는 원재료를 매입한 사업자가 최종 제품 판매시 불리하지 않도록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성국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물가 상승,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소비 위축 등 복합

적 요인으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최소한의 안정장치로 작동하고 있지만 한시적 조치에 불과해 제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항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령 개정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율·한도 개선 △조세 형평과 과세 중립성에 부합하는 제도 보완 등을 담고 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제청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하나은행은 17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홍길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주시-하나은행, 금융지원 협력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 입주 희망 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하나은행과 손잡고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와 하나은행은 17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홍길 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가 추천하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들은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 관련 업무 △대출입 서비스 △각종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산업 입주 희망기업들은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최대

1.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산업 입주기업의 초기 정착과 자금 유동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난 6월 분양을 시작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주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최고의 외환 전문 은행인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든든한 금융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비롯한 지역 내 투자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과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장사시설 제도 개선 ·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시급”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서연 의원(진북동, 인후1·2, 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장사시설 제도 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서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전주시 관내 봉안시설 운영 중단 사태로 유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인근 자연 장지까지 포화하면 피해 규모는 3,000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단순한 민간시설 경영 실패가 아닌, 장사시설 인허가

및 감독 체계의 미비와 유족 보호 제도의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사시설은 시민의 추모권과 인격권이 실현되는 공공적 공간인 만큼, 유족들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건의안은 장사시설 폐쇄시 유족 보호 절차와 피해 구제 방안 제도화와 장사시설의 장기 운영계획,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조정실장실, 보건복지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축!전주매일 창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농협중앙회남원시지부 지부장 오영식 / 남원농협 조합장 박기열 / 준향골농협 조합장 김영규 / 지리산농협 조합장 정대환 / 운봉농협 조합장 오용담 / 남원원협 조합장 김용현 / 남원축협 조합장 한경식 / 전북지리산낙협 조합장 김재욱

농업인의 행복을 향해  
지역 농축현과의 협동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을 향해  
보다 더 큰 세계를 향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의  
아름다운 항해가 시작됩니다

희망농업, 행복농촌  
농협이 만들어 갑니다

NH농협